이슈페이퍼 2021-26

KCTULI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 신자유주의에서 케인스주의로(?)

박하순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1. 1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 1

2. 미국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 3

3. 바이든의 경제정책 12

4. 미국경제의 현황과 논쟁점들 19

5. 전망 45

표 목 차

[표 1] 각국 성인 1인당 자산 관련 지표들(2021년 기준) 10
[표 2] 주요국의 분기별 국내총생산지수(2019.4/4=100) 23
[표 3] 미국의 산업 업종별 취업자 규모 변화(단위: 천명) 34

그 림 목 차

[그림 1] 미국의 경기순환별 국내총생산 연평균증가율 3
[그림 2] 미국의 비금융 법인자본 이윤율 4
[그림 3] 미국의 경기순환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 6
[그림 4] 미국 소비물가지수(1914.1-2021.11) 7
[그림 5] 미국의 연도별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규모(1929-2020) 8
[그림 6] 국내총생산 대비 주요국의 공적 사회보장 지출 규모(%) 11
[그림 7] 미국의 실질국내총생산(2012년 기준)(1990.1/4-2021.3/4) 20
[그림 8]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1929-2020)(2012년 기준) 24
[그림 9] 산업생산지수: 자동차산업과 반도체 산업 25
[그림 10] 미국 실업률(2006년 1월-2021년 11월) 27
[그림 11] 미국 비경제활동인구(2006.1-2021.11)(단위: 천명) 29
[그림 12] 미국 경제활동참가율(1975년 1월 - 2021년 11월) 30
[그림 13] 미국 고용률 31
[그림 14] 미국의 비농 전산업 취업자수(단위: 천명) 32
[그림 15] 미국 제조업과 전산업 시간당 실질생산지수(2012=100)(1987.1/4-2021.3/4) 35
[그림 16] 미국 제조업과 전산업 시간당 실질생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1988.1/4-2021.3/4) 36
[그림 17] 미국의 소비자물가 증가율(1940년 1월-2021년 11월) 38
[그림 18]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39
[그림 19] 미 재무성증권 10년물 실질 수익율(2006.1.2.-2021.12.8.) 40
[그림 20] 미국의 분기별 재정적자(2006.1/4-2021.3/4)(단위: 백만달러) 41
[그림 21]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각 주체의 정부부채 규모 비율 42
[그림 22]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이자지불액 비중(%)(1940-2020) 43
[그림 23] 미국의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들 44

1. 서

바이든 집권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이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스스로 1929년 대불황 와중에 등장해서 케인스주의 정책을 도입한 루스벨트를 거론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미국의 정부지출 규모가 폭증했다. 재난구제/경기부양이 목적이었다. 트럼프 정권 말기인 2020년 3월에 2.1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이 통과되었다. 기업대출, 실업급여, 가계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정부지출 프로그램이었다. 이 결과 2020년에 재정적자가 3.1조달러였고,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의 14.9%에 이르러 1945년 이후 최대치였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 정권 막바지였던 2020년 12월에는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재난구제 정부지출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 시기의 이런 대규모 재난지원/경기부양안에 더해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 2021년 3월에는 또 다른 재난구제를 위한 1.9조달러 규모의 정부지출 법안(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이 통과되었다. 1년 안에 이루어진, 트럼프 때 두 차례의 대규모 정부지출안과 바이든 때의 이 정부지출 계획안을 합하면 4조 9천억달러가 되어 오바마 정부 시절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8,500억 달러 내외의 구제금융 규모의 5배가 넘는 규모다.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지출 규모의 비율은 오바마 때의 그것에 비해 4배가 넘는다.[1)]

바이든은 이외에도 향후 8년 내외에 걸쳐 지출될 정부지출 계획이어서 매년 지출 규모를 따지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니긴 하지만 1.2조 달러의 사회간접자본 법안을 통과시켰고, 1.7조 달러 규모의 사회보장법안[2)]을 제출하고 있다.

---

1)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에는 대기업 대출이 약 4,5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진정한 정부지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노동자들의 임금지원에 사용된다면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어서 대기업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2) 애초 이 사회보장법안에서의 정부지출 규모는 3.5조 달러였는데 민주당 중도파 두 명의 상원의원(상원의 의석분포는 공화당의원 50 대 민주당 및 진보파 의원 50으로 이루어져 있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트럼프 시절부터 정부지출 규모도 매우 커졌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런 대규모 정부지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 오바마 시기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조기 긴축으로 돌아간 것이 잘 못되었고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경기부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한 것이다. 즉 오바마 때와는 정부지출 규모도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도 다른 것이다.

이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런 정책선회가 가능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그리고 바이든의 경제정책이 현재 미국 경제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어떤 쟁점을 낳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단적으로 바이든의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3]에서 케인스주의[4]로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따져보기로 하자. 한편 미국자본주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미국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되는지도 살펴보기로 하자

3)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동시 발생)을 제어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올려 물가를 잡으려 한 정책에서 시발하였고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에 장애라 생각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거가 완화하려 했다. 화폐의 적절한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고(통화정책) 이 화폐공급도 물가를 속등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제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완전고용 정책을 포기하였다.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위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고 노동조합을 억압하려 하고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나 사회복지 축소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시장(무역, 투자, 금융)의 완전한 개방을 지향하였다. 정책적 결과는 많은 나라에서 물가는 잡혔으나 성장이 이전보다 후퇴하였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시장경제는 수시로 불완전고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부족으로 인한 불완전고용의 시기에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부지출 증대를 옹호한 정책이다. 노동조합에 우호적이고 사회복지 강화를 추구하였다. 1950-60년대 높은 성장률과 완전고용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일부 케인스주의자들은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케인스주의 정책의 결과라는 데 이견을 표하고 있다. 두 번에 걸친 석유가 급등(오일 쇼크)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을 케인스주의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런 케인스주의의 결함은 신자유주의적 처방으로는 치유될 수 없고 독점자본의 사회화정책을 통해서 진정한 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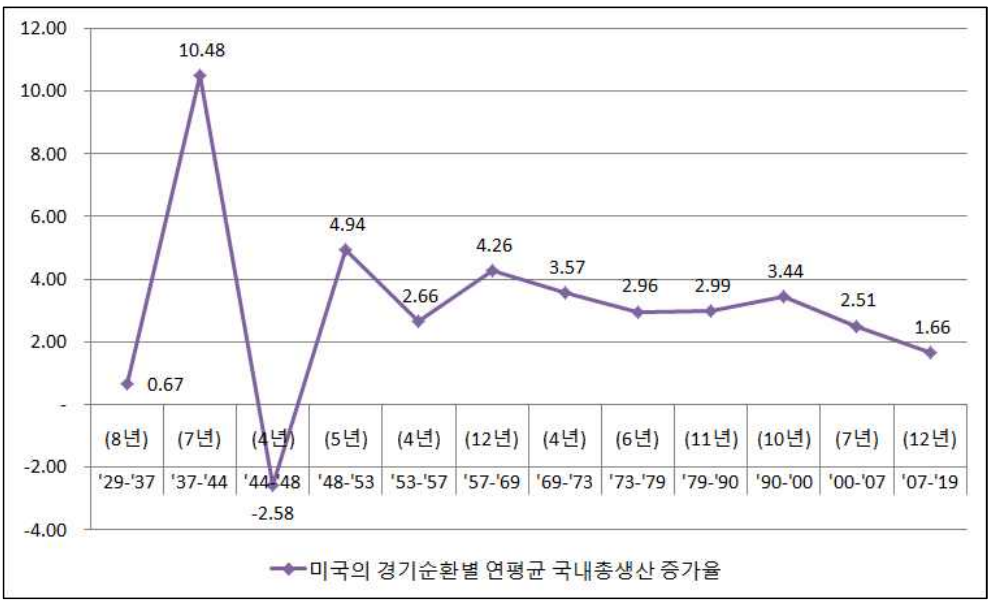
2. 미국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미국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알아보기로 하자.

1) 성장

미국자본주의의 성장 추세를 경기순환주기별로 연평균성장률을 구해서 살펴보기로 하자([그림 1] 참조).

[그림 1] 미국의 경기순환별 국내총생산 연평균증가율



자료: 미국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

전후 장기호황을 구가하던 미국 자본주의는 70년대에 성장률이 낮아졌다. 1957-69년 경기순환[5]에서는 12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4.26%에 달하던 것이 73-79년 경기순환에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2.96%로 낮아졌다. 1990-2000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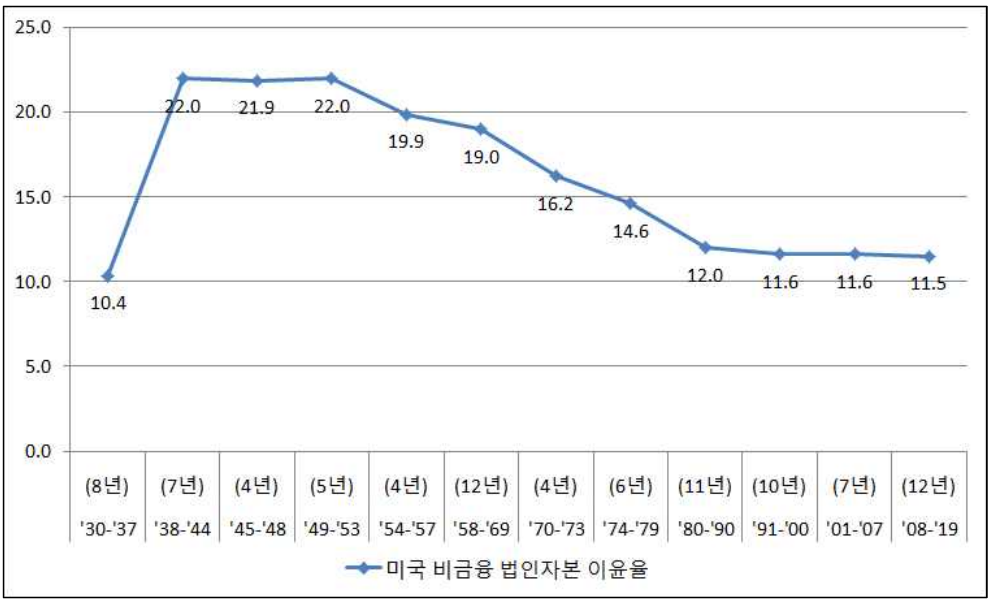
5) 미국자본주의의 경기순환주기 획정에 대해서는 박하순(2018), "미국 등 주요국 및 한국 경제의 장기불황과 새로운 위기전망"(http://kctuli.kctu.org/bbs/read.php?tbl=paper&seq=249&page=6)을 참조하라.

기순환에서는 3.44%로 성장률이 다시 약간 회복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다시 성장률 저하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별히 2007-19년 경기순환에서는 연평균성장률이 1.66%로 대폭 낮아졌다. 미국자본주의는 장기불황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2) 이윤율 추세

이율율은 자본축적의 기초가 되는 지표다. 이윤율이 높으면 자본축적이 활발해져 성장률 또한 높아질 수 있고, 이윤율이 낮으면 자본축적이 둔화되어 성장률 또한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2] 미국의 비금융 법인자본 이윤율



자료: 미국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자본주의의 이윤율의 대표로 비금융 법인자본 이윤율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면[6] 미국자본주의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윤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6)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전제한, 생산가격에 기초해 산출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이윤율('생산가격 이윤율')에 근

([그림 2] 참조). 1960년대까지는 그래도 이윤율 저하 속도도 비교적 낮고 여전히 높은 이윤율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윤율하락이 더 가팔라졌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 이윤율 수준이 매우 낮아진 상태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이윤율의 추가적인 하락이 거의 없이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를 신자유주의시대라 하는데 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효과는 이윤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저지했으나 그렇다고 이윤율을 상승세로 되돌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윤율의 장기에 걸친 저하로 인한 자본축적의 둔화/성장률 둔화를 구조적 위기라 하는데 미국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도 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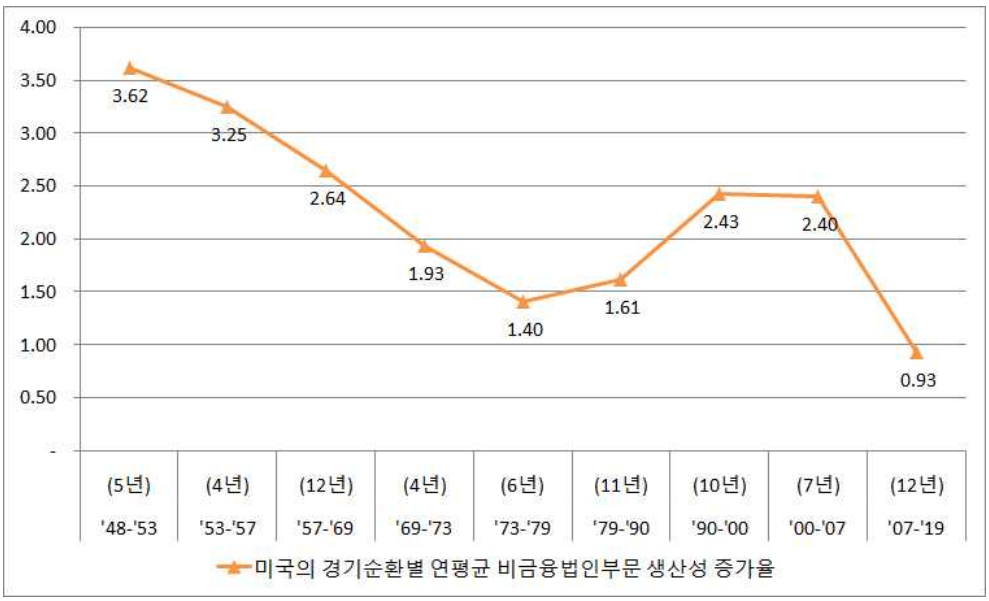
3) 생산성의 변화

미국자본주의의 생산성증가율은 5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대체로 둔화하였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에 생산성이 높아졌다가 2008년 위기 이후 다시 낮아졌다.

1990년대 생산성증가율은 주로 1990년대 후반에 두드러졌는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의 생산성증가를 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시기의 생산성상승은 2007-2019년 경기순환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생산성 상승이 현저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수스 슈밥에 의해 제 4차산업혁명론이 제기되었는데 산업혁명에 걸맞는 생산성 향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한 이윤율이다. 고정자산은 역사적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고, 감가상각은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진행했고, 인플레 조정을 거친 이윤율이다. 이윤율 추계를 하는 많은 이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인용하는, 하나의 경기순환 안에서 등락이 심한 시장가격 이윤율과는 다르고, 시장가격이윤율은 마르크스적 이윤율은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하순(2018), 윗 보고서를 참조하라.

[그림 3] 미국의 경기순환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



자료: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4) 물가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1차 대전 시기, 2차 대전 종전, 한국전쟁 때 높았고, 1970년대는 아주 긴 기간 동안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그림 4] 참조).

다른 시기의 물가상승과는 달리 1973년 석유위기 이후의 물가상승은 1970년대 말 대폭적인 금리인상('볼커 충격')을 초래하였고 그 이후 점차 낮아지지 시작했다. 이 볼커충격은 신자유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이었는데 이후 물가는 일정하게 통제되었지만 1950-60년대의 고성장은 사라지게 되었고 장기에 걸쳐 임금정체와 불안정노동의 고통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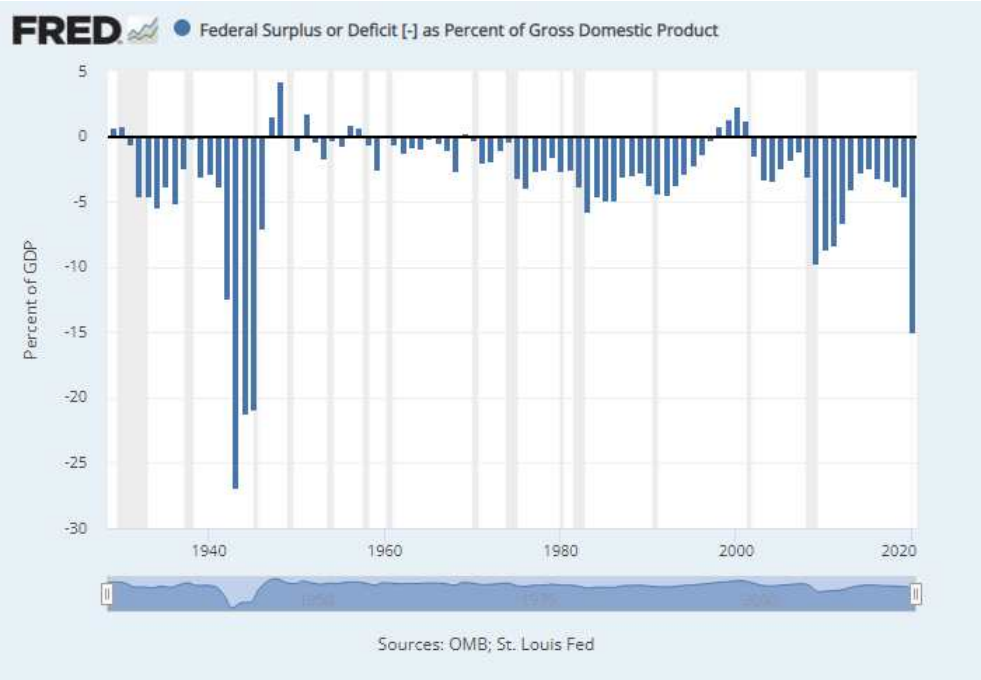
[그림 4] 미국 소비물가지수(1914.1-2021.11)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5) 재정수지

미국경제에서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했던 때는 2차대전 때이다. 군비지출을 적자재정을 통해서 조달한 때문이다. 군사적 케인스주의라 불리는 시기다. 1980년대에도 재정적자가 꽤 심했는데 레이건 시기에 감세, 냉전막바지 군비지출 증대 등이 원인이 되었다.

[그림 5] 미국의 연도별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규모(1929-2020)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 대응으로 재정적자가 심해졌고, 트럼프 시기에도 감세와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한 대처를 위한 정부지출 증대로 재정적자가 심해졌다. 특히 2020년의 재정적자는 2차 대전 시기 재정적자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는 1970년대까지의 (군사적) 케인스주의 시대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1950-60년대의 케인스주의 시대에 오히려 재정적자가 크지 않다. 미국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는 시기의 호황 때문이다. 물론 1930년대 대불황 시기와 1940년대 초반의 (군사적) 케인스주의 시기에 재정적자가 심각했다. 케인스주의시기든 신자유주의 시기든 경제위기나 전쟁에 직면해서는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선전과는 달리 실제로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축소시키지도 못했다([그림 5] 참조).

결국 1930년대 이후 미국자본주의는 경제위기와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부문이 비대해진 국가독점자본주의일 뿐이고 케인스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신자

유주의적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구분이 있을 뿐이다.

6) 자산불평등

미국의 소득과 자산불평등도는 유명하다. [표 1]에서 보다시피 성인 1인당 자산평균값은 50만 5,421달러로 168개국 중 2위로 매우 높은데 중위값 순위는 26위다. 중위값은 79,274달러로 한국의 중위값 89,671달러보다 적다.

지니계수는 순위가 높을수록 자산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미국은 168개국 중 24위다. 부익부빈익빈의 결과라 해야겠다.

[표 1] 각국 성인 1인당 자산 관련 지표들(2021년 기준)

					(단위: 달러)		
국가	중위값	평균	중위값/평균	지니계수	자산 평균값 순위	자산 중위값 순위	지니계수 순위
브루네이	5,122	39,098	13%	91.6	63	92	1
브라질	3,469	18,272	19%	89.0	87	110	3
러시아	5,431	27,162	20%	87.8	75	91	10
스웨덴	89,846	336,166	27%	87.2	11	20	13
사우디아라비아	15,495	68,697	23%	86.7	40	56	16
미국	79,274	505,421	16%	85.0	2	26	24
인도	3,194	14,252	22%	82.3	101	111	37
멕시코	13,752	42,689	32%	80.5	60	64	57
베트남	4,559	14,075	32%	80.2	103	100	60
노르웨이	117,798	275,880	43%	78.5	17	15	78
스위스	146,733	673,962	22%	78.1	1	8	81
베네주엘라	7,341	21,040	35%	78.1	82	82	82
독일	65,374	268,681	24%	77.9	18	29	85
홍콩	173,768	503,335	35%	74.6	3	5	115
덴마크	165,622	376,069	44%	73.6	7	7	121
영국	131,522	290,754	45%	71.7	15	11	132
중국	24,067	67,771	36%	70.4	43	43	141
프랑스	133,559	299,355	45%	70.0	14	10	144
스페인	105,831	227,122	47%	69.2	24	16	147
한국	89,671	211,369	42%	67.6	25	21	153
이탈리아	118,885	239,244	50%	66.5	21	14	159
오스트레일리아	238,072	483,755	49%	65.6	4	2	161
일본	122,980	256,596	48%	64.4	20	13	162
벨기에	230,548	351,327	66%	60.3	8	4	165
슬로바키아	45,853	68,059	67%	50.3	42	32	168

자료: Credit Suisse Global Wealth Databook[7)]

7) 공적 사회보장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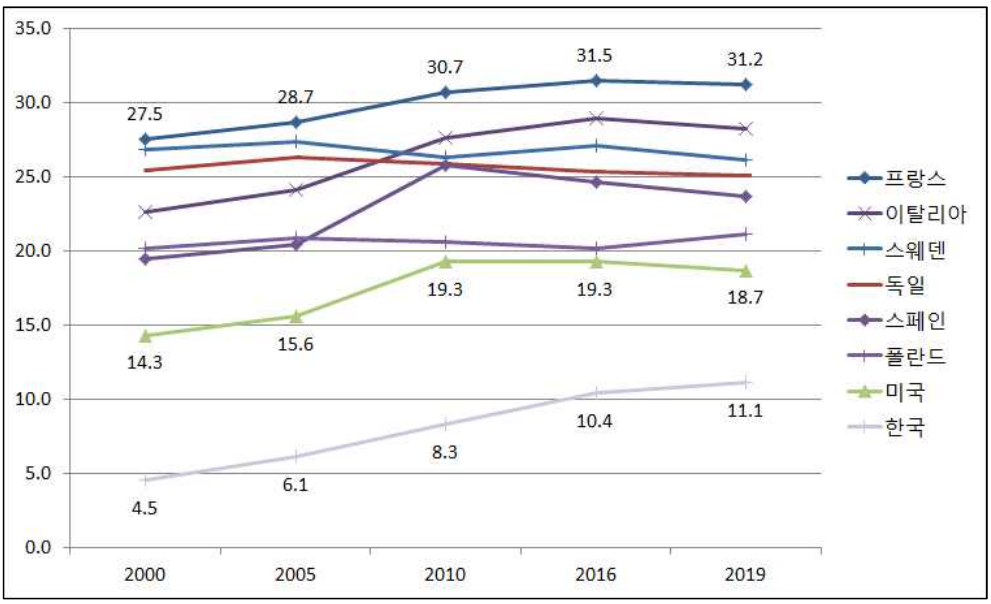
미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 사회보장 지출 규모가 주요 선진국 수준에 한참

7)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wealth_per_adult 를 참조하라.

못 미친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 사회보장 지출 규모가 가장 큰 프랑스는 2019년에 31.2%인데 미국은 18.7%다. 더구나 2010년 이래로 약간 감소하고 있기까지 하다([그림 6] 참조).

국내총생산 대비 총 사회보장 지출 규모는 29.6%(2017년 기준)로 가장 높은 프랑스의 31.2%에 거의 근접하고 있지만 미국은 총 사회보장 지출에 비해 공적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유독 적은 나라다.

[그림 6] 국내총생산 대비 주요국의 공적 사회보장 지출 규모(%)



자료: Wikipedia(https://en.wikipedia.org)(원 출처: OECD)

3. 바이든의 경제정책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코로나 19 대유행 와중에 실시되고 있다. 대규모 재난구제/경기부양 법안으로 일차적으로 표현되었다. 다음으로 통과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관련 법안, 그리고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사회보장 강화 관련 법안도 바이든의 경제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법안은 대규모 정부지출을 통한 재난구제/경기부양의 내용 이외에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교육훈련 확대, 불평등 축소, 기후위기에 대한 투자, 의료보험 접근권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정세 변화

바이든의 경제정책의 변화가 가능하게 된 정세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1)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일어났고, 2020년 5월 코로나 19 대유행 와중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흑인생명은 소중하다' 단체 주도로 장기적인 전국적인 대중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런 미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의 근저에는 미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하에서 실천된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순환적 위기를 막지도 못했고,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부익부빈익빈이 극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는 트럼프 현상(기존 질서에 대한 극우적 반응)마저도 미국 중하층 백인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규모 경기부양 주창자들의 주류화

트럼프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도 1.5조 달러 규모의 감세가 있었고 2019년에는 3,2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출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2018년에 7,790억달러, 2019년에 9,840억달러가 발생했고 이는 미국 예산국(CBO)의 10년 전망에서 예상한 것보다 60%가 늘어난 것이었다. 이런 트럼프의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이 여러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제고, 실업률 하락의 효과를 나타내자,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 경제학자 죠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이를 기화로 오바마 정부의 국가경제위원장 래리 서머스(Lawrence H. Summers)의 "장기침체론"을 비판하였다. 래리 서머스는 2013년에 미국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져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 완전고용이나 높은 성장을 달성하려 한다면 금융시장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딜렘마가 존재한다는 논리의 장기침체론을 펼쳤다. 스티글리츠는 '[트럼프 집권 초기의] 충분한 경기부양정책은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바마 집권 시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 규모가 너무 작아서 성장률이 낮았다', '이런 불충분한 경기부양으로 인한 저성장을 변호하는 "장기침체론"은 현실에서 오류임이 증명되었다'는 등의 취지의 비판을 하였다.[8] 사실 오바마의 경기부양 규모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작다는 주장은 위기 초기부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즈 칼럼 기고자로 미국에서 대중적 영향력이 압도적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9] 한편 민주당지지 경향의 케인스주의자 내부의 이런 균열은 뒤에서 보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재난구제/경기부양 규모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 이어졌다. 래리 서머스 등은 재난구제/경기부양 규모가 너무 커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폴 크루그먼 등은 오바마 시기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너무 적은 경기부양을 실시하고 서둘러 이를 종결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큰 규모의 재난구제/경기부양을 지지했고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와 달리 일시적일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면 연준은 이에 대처하는 수단을

8) https://www.project-syndicate.org/bigpicture/debate-stiglitz-and-summers-face-off-on-secular-stagnation 를 참조하라.

9) https://krugman.blogs.nytimes.com/2009/01/06/stimulus-arithmetic-wonkish-but-important/ 를 참조하라. 아래에서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는 논리는 주로 폴 크루그먼을 인용하기로 한다.

가지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부장관 재닛 옐런(Janet Louise Yellen) 역시 후자의 입장이다. 2008년 위기 이후에 있었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긴축적으로 대응해 일정한 정책실패가 있었다는 케인스주의자들의 견해가 바이든 정부하에서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정치/이데올로기 정세의 변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위신은 추락했다. 이를 계기로 2016년과 2020년 미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 돌풍이 있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의 도전은 두 번 다 실패하긴 하였지만 미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지지세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10] 2021년 41%의 미국인이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면 52%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2019년엔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본 비중이 39%였다. 2019년 사회주의의 지지도 매우 높아진 것인데 2021년에는 더 높아진 것이다. 2019년엔 미국 젊은이(18-34세) 사이에서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중은 55%였는데 2021년엔 약간 줄어 51%,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약간 하락한 반면 다른 연령그룹에서는 약간 증가하였다.

연방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 미국인 66%가 찬성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62%였다. 민주당원 및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응답률이 7%포인트 증가했고, 공화당 및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5%포인트(18-34세 그룹에서는 2019년 이 응답률이 40%였다가 2021년엔 56%로 무려 16%포인트 증가), 무당파에서 2%포인트 증가하였다.

2021년 미국 성인들 중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비중은 57%,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비중은 36%로 나타났는데. 2019년에는 61%

10) https://www.surveymonkey.com/curiosity/axios-capitalism-update/?fbclid=IwAR3EdYEZJ1tgV9TbO6Ovo42OV-hrv4y7XiO4lbiQ_6KT9BaNn3qgryl3fPM 를 참조하라.

대 36%였다.

젊은이들(18-34세) 사이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2021년 조사에서는 49%, 부정적인 견해가 46%로 나타났다. 2019년엔 58%대 38%였다.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많이 줄었고 부정적인 견해는 많이 늘었다. Z세대(18-24세) 에선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42%, 부정적인 견해가 54%를 차지하고 있어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비중이 긍정적인 견해보다 훨씬 높다.

젊은 공화당원 및 지지자들도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많이 줄어들었다, 2019년 81%에서 2021년 66%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최대 선거쟁점이 되었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였다. 오바마 정부에서 확대된 의료보장('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본 이들이 이를 지키고자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선거에서는 민주당 내 좌파가 약진하였다. 그리고 인종문제, 기후위기 문제가 더욱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이제 자신보다 좌파적인 정치인들에게 "사회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기 어려워졌고, 오히려 이 딱지가 영예스러운 뱃지가 되어가고 있다. 2019년 이전에 비하면 엄청난 정치/이데올로기상의 변화라 해야겠다.

2) 바이든의 경제정책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미국은 월스트리트 은행가나 헤지펀드 매니저, 최고경영자들이 건설하지 않았다. 중산층이 세웠다"라는 말로 요약된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그가 통과시켰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주요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1) 재난 구제/경기 부양 법안(American Rescue Act)

트럼프의 CARES Act와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 이어 바이든 정부

에서 통과된 재난 구제/경기 부양 법안(American Rescue Act)의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봉 75,000불 이하 소득자에게 1,400불 지급 및 다른 때와는 달리 이들의 피부양인들에게도 지급

○ 2021년 9월까지 실업급여 증액(주 300불, 팬데믹 초기엔 추가 실업급여 주 600불)

○ 긴급 유급 휴가 제공

○ 가족 연봉 합계 40만불 이하 가구 아동 및 청소년 세액공제 증액(기존 연 2000불에서 6세 이하는 3,600불,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불로 증액. 3900만 가구 혜택; 세금을 안내거나 거의 안내는 가구에겐 현금지급; 2021년 1년에 그치고 있는데 뒤에서 볼 사회보장강화법안에서 이를 1년 더 연장하려 하고 있음)

○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 학교 지원 1,300억불

○ 임대료, 모기지, 각종 공과금 지원 450억불

○ 방역을 위한 의료비용

○ 주정부 지방정부 등 지원 3,500억불

○ 중소기업 지원

○ 운송 관련 방역비용

○ 의료보장 관련 비용

이 법안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중하위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며(지원의 70%가 이들에게 귀속), 이런 지원은 이들 가구들이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기부양 효과를 가질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두 차례에 걸친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응한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이미 있었는데 1년도 안되어 1.9조 달러 규모의 재난구제/경기부양안을 또 통과시킨 것이다.

(2)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11)]

11월 15일에 바이든이 서명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된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총 1.2조 달러 규모(신규 정부지출 5,5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출 계획이다. 8년에 걸쳐 투자가 진행될텐데 이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

○ 도로, 교량, 주요 건설 프로젝트 1,200억불
○ 철도선로개선 660억불
○ 대중교통 390억불
○ 공항 250억불
○ 항만 170억불
○ 전기차 투자 75억불
○ 탄소배출 저감 버스 선박 75억불
○ 고속통신망 650억불
○ 전력 송배전 망 개선 730억불
○ 상수도 현대화 550억불

(3) 사회보장 확충과 기후변화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이 법안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회보장 확충과 기후변화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3-4세 취학 이전 아동의 2년 무상교육

11) 총 1.2조 달러 법안으로 통과되었으나 새롭게 늘어날 정부지출 규모는 5,500억 달러 정도다. 한편 이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이 담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은 트럼프 때도 등장했으나 그 규모도 지금 얘기되는 것보다 적었고 진지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 중하위 소득 가구에게 아동 돌봄 비용이 소득의 7%를 넘어갈 경우 이 비용 보조

○ 전국적으로 유급 휴가 및 병가 프로그램 도입

○ '재난 구제/경기 부양 법안'에 들어 있는, '아동 세액공제 증액'(Child Tax Credit)(이하 '아동수당'이라 하자) 1년 연장,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1년 연장

협상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1,090억불이 소요될 지역 초급대학 2년 무상교육이 사라졌고, '아동 세액공제 증액'도 애초에는 영구화할 생각이 있었으나 1년 연장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의 지출계획은 대기업 최저 법인세 15%,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등 대기업 세금 인상을 통해 8,300억불, 고소득자 과세를 통해 6,400억불 등을 통해서 충당하려 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정책 선회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재난 구제/경기 부양 법안'과 '사회보장 확충과 기후변화 법안'에 들어 있는 새 '아동수당'을 미국사회에서 "사회 복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사회적 부양이 필요한 아동 가족 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에 빗댄다. 이 AFDC는 1996년 클린턴의 생산적 복지("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는 끝났다", "큰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를 계기로 1997년에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 지원이 된 '빈곤 가족을 위한 일시적 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로 대체되었고 그 중요성이 현저히 하락하게 되었다. 물론 새 법안들에서의 '아동수당'은 AFDC의 지원액수에 현저히 못미친다. AFDC 하에서 3인 가족이 받는 부조액이 미국의 중위소득의 25% 정도였다면 새 법안에서의 '아동수당'은 현재 미국의 중위소득의 7%에 그치고 있다. 다른 점으로는 이번에는 자격(소득 기준)만 갖추면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엄격한 심사 같은 것은 없다.[12] 그런데 이 '아동수당'은 1년 연장에 그치고 있고 액수도 AFDC에 못미치고 영구화도 이룩하지 못했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상원을 확실히 장악하면 영구화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 https://www.nytimes.com/2021/03/11/opinion/biden-covid-relief-welfare.html 를 참조하라.

4. 미국경제의 현황과 논쟁점들

2017년 트럼프 시기부터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의 요소가 시행되었다. 코로나 19 대유행의 충격과 함께 경제위기가 도래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경기부양은 재난구제의 성격이 강했지만 경기부양의 효과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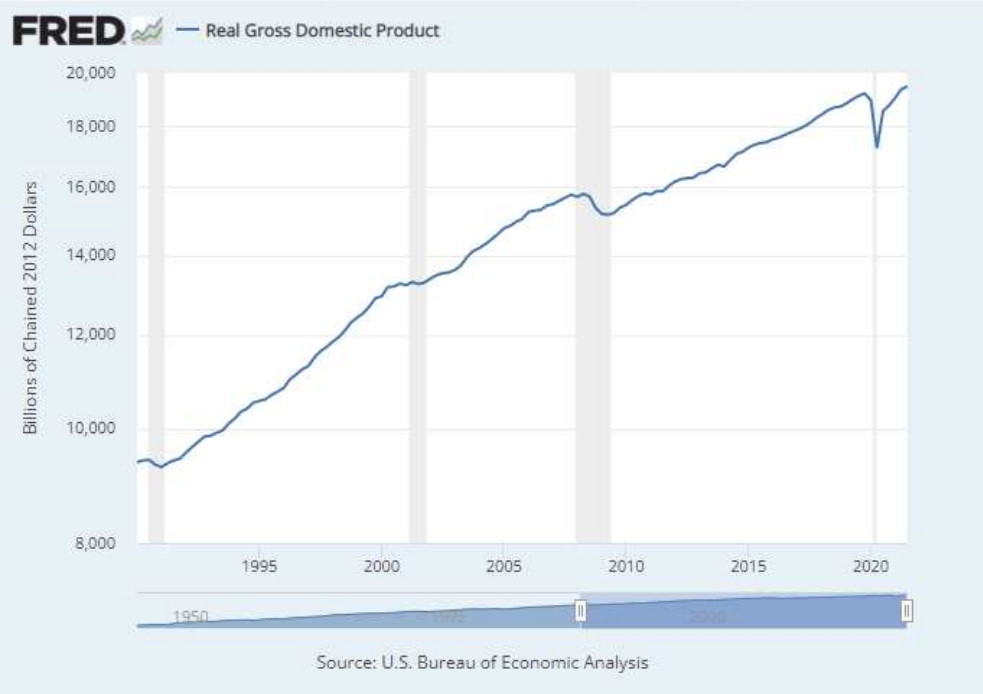
한편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이제 막 실천에 들어갔고 그 일부는 의회통과를 준비 중이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트럼프부터 시행된 대규모 재난구제/경기부양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미국경제의 현황을 살펴보자.

1) 미국경제의 현황

(1) 국내총생산 및 성장률-경제위기 및 위기로부터의 회복

미국경제는 2020년 1사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 19 대유행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이 실시되면서 2020년 2사분기에 -8.9%라는 이례적인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 이후 2020년 3사분기 7.5% 플러스 성장, 4사분기 1.1%, 2021년 1사분기 1.5%, 2021년 2사분기 1.6%, 3사분기 0.5% 성장을 하면서 경제위기로부터 일단 벗어난 상태다.

[그림 7] 미국의 실질국내총생산(2012년 기준)(1990.1/4-2021.3/4)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미국 경제의 경기 순환 주기를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전미경제연구소(NBER)도 2021년 7월 19일에 2020년 2월 정점을 찍은 경기가 2개월 뒤인 4월에 저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 단위로 보면 이번 경제위기(순환적 위기, 즉 공황)는 단 2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역사상 최단 경제위기로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분기별 성장률로 보면 2020년 3월이 속한 2020년 1사분기와 4월이 속한 2사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통상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제위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미국은 경제위기를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5개 분기 동안 플러스 성장을 해서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가 단 2개월이라는 짧은 경기하강이라 할지라도 그 깊이는 매우 깊었다. 미국 분기별 성장률 통계는 1947년 2사분기부터 발표되었는데 이번 위기 이전까지 가장 심각한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률은 1958년 1사분기에 기록한 -2.6%였고,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기 가장 심각한 마이너스 성

장률을 기록한 분기는 2008년 4사분기였는데 -2.2%였다. 그런데 이번 위기에서 2020년 2사분기 성장률은 -8.9%였다. 이제껏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연간 성장률이 최악이었던 해가 1932년이었고 그 해 성장률이 -12.9%였으니 이 해 최악의 분기 성장률이라 해봐야 -5%내외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이 시기에는 분기별 성장률 통계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것에 비춰 봐도 2020년 2사분기 성장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3사분기 성장률은 플러스 7.5%로 이 또한 역대 어느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이었다. 이전에는 1950년 1사분기와 3사분기에 기록한 3.9% 성장률이 최고치였던 것이다.

한편 이번 위기 직전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점은 당연히 2019년 4사분기이고 이번 위기에서 실질 국내총생산의 저점은 2020년 2사분기다(이하 총생산은 전부 실질 총생산). 최저 총생산 규모를 보인 2020년 2사분기의 총생산은 위기 직전 최고 총생산을 보인 2019년 4사분기에 비해 10.1%가 감소하였다. 지난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위기 이전 총생산이 정점이었던 2007년 4사분기의 총생산에 비해 위기 발생 이후 총생산이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 2사분기의 총생산은 3.8%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에서의 총생산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3사분기에 전기 대비 7.5%라는 매우 급속한 성장을 하는 등 성장을 이어가면서 2021년 2사분기에 이르러서, 즉 6개분기가 지나서 2019년 4사분기의 총생산을 넘어섰다. 다른 위기 때에 비해 비교적 빨리 위기 이전 총생산 규모를 회복한 것인데 참고로 지난 2008년 위기 때는 위기 이전 총생산 규모를 넘어서는 데 12개 분기가 소요되었다.

이런 사정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자. [그림 7]은 로그눈금으로 미국의 실질국내총생산(2012년 기준)을 그려서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를 가지고 시기별 성장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1990년대 초반의 위기,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번의 위기를 비교해보면 이번 위기에서 얼마나 성장감소가 빠르게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났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한편 회복도 매우 가파른데 완전한 브이(V)

자 형태는 아니어도 이와 거의 유사한 회복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20년 4사분기부터는 성장회복속도가 하락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기 이전 총생산 규모를 이미 회복하고 있어서 2008년 위기 때에 비해 위기 이전 총생산 규모를 회복하는 데 훨씬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위기는 매우 깊은 위기였지만 위기로부터의 회복속도도 매우 빠른 위기였다. 위기의 깊이가 깊었던 것은 위기라 코로나 19 대유행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이 큰 영향을 미쳤고 신속한 회복은 록다운 해제가 주된 요인이었지만, 적자재정을 통한 대규모 정부지출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신속한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위기의 깊이와 이로부터의 회복의 정도나 신속성 정도를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자. [표 2]는 각국의 4/4분기 국내총생산을 100으로 잡고 이어진 분기에서의 국내총생산규모를 지수화한 것이다. 중국은 록다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발생해 2020년 1사분기에 총생산이 저점에 이르렀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 2사분기에 저점에 이르렀다. 저점에서의 국내총생산은 한국이 95.6으로 가장 양호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그 다음으로는 일본(91.5), 중국(90.5), 미국(89.9), 독일(88.4) 순서이지만 이들 네 나라의 생산규모 축소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회복 정도를 보면 중국의 회복이 가장 빠르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순이다. 미국은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에 록다운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 19 대유행을 거의 완벽히 통제한 중국보다는 회복속도가 느리지만, 독일이나 일본보다 회복속도가 빠르고,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성장감소가 큰 것을 감안하면 한국보다도 더 회복속도가 빠르다. 중국은 2020년 2사분기에 이미 위기 이전 생산규모를 회복했고(V 자 회복), 한국은 2021년 1사분기에 미국은 2사분기에 회복했고, 일본과 독일은 2021년 3사분기에 이르러서도 이전 생산 규모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이 일본과 독일, 그리고 한국보다 회복속도가 빠른 것은 정부개입 정도가 이들 나라보다 더 컸던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2020년과 2021년(예상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14.9%, −10.8%인데 반해, 독일의 그것은 각각 −4.3%, −6.8%이고, 일본의 그것은 각각 −10.3%, −9.0%이다.[13] 한편 한국의 그것은 2020년엔 −3.7%이고 2021년엔 세수

의 예상밖의 증가로 -1~-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요국의 분기별 국내총생산지수(2019.4/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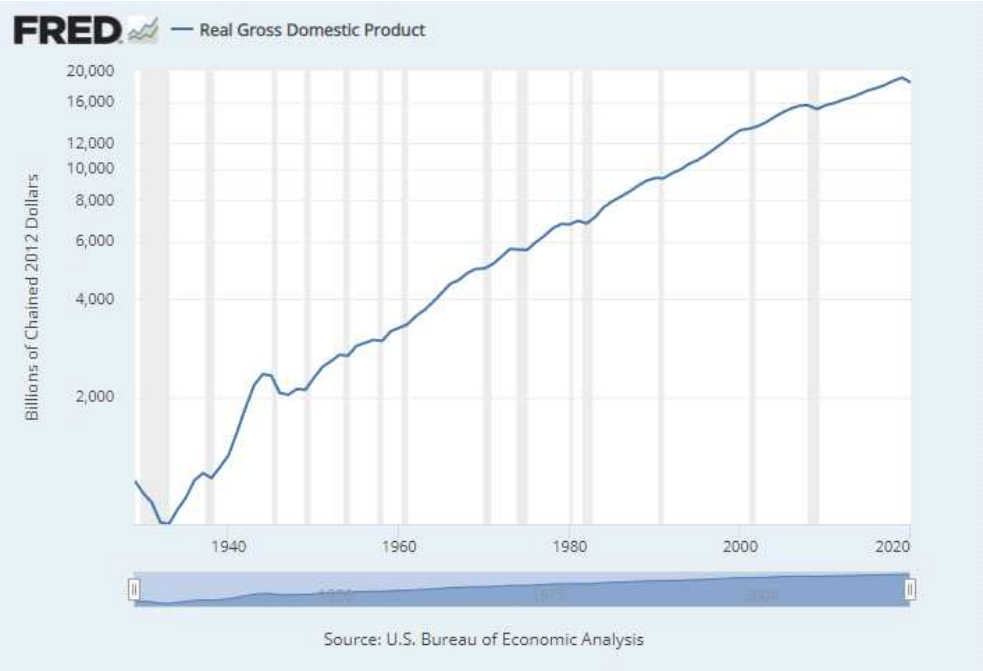
	2019.4/4	2020.1/4	2020.2/4	2020.3/4	2020.4/4	2021.1/4	2021.2/4	2021.3/4
미국	100.0	98.7	89.9	96.7	97.7	99.2	100.9	101.4
한국	100.0	98.7	95.6	97.8	98.9	100.6	101.4	101.7
일본	100.0	99.4	91.5	96.5	99.2	98.2	98.5	97.8
중국	100.0	90.5	100.2	103.1	106.4	106.6	107.9	108.1
독일	100.0	98.2	88.4	96.4	97.1	95.3	97.1	98.9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편 이런 대규모의 신속한 정부개입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2020년 위기는 다른 시기의 위기에 비해 그리 심각한 위기가 아니게 되었다([그림 8] 참조).

13)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1/10/12/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1 를 참조하라.

[그림 8]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1929-2020)(2012년 기준)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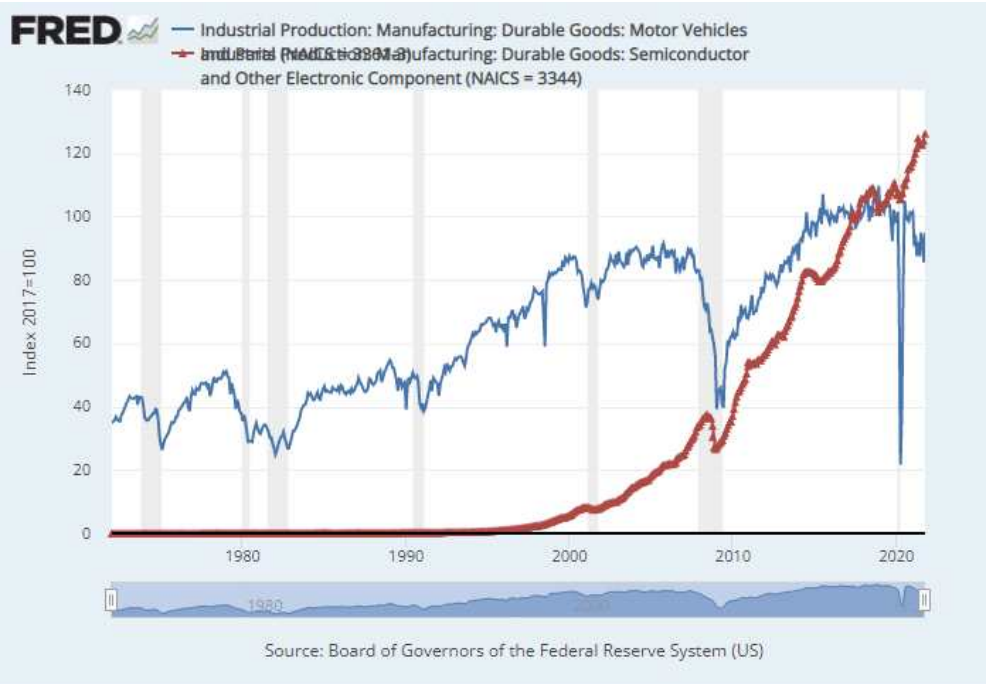
이런 위기 및 그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낳은 요인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자. 이를 위해서는 이번 위기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위기는 미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순환적 공황, 그리고 코로나 19 대유행(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이 결합되어 나타난 위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조적 위기는 80년대 이래 지속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조건으로서, 1960-70년대에 낮아져서 1980년대 이래 그 낮은 이윤율이 지속되고 있는 마르크스적 이윤율 및 여기에서 비롯한 자본축적의 둔화인데 이번 경기순환을 전후해서 이 구조적 위기가 특별히 심각해진 것은 아니어서 이번 위기를 특별히 증폭시키는 요인은 아니라 할 수 있다.[14] 그리고 순환적 공황의 경우, 2008년 위기 이후의 회복이 어느 위기에서보다도 길긴 했지만 그 회복세가 매우 미약해서 이번 위기 직전에 거품이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순환적 공황의 효과 역시 코로나 19 대유

14) '미국 등 주요국 및 한국 경제의 장기불황과 새로운 위기 전망' (http://kctuli.kctu.org/bbs/read.php?tbl=paper&seq=249&page=5 를 참조하라)

행(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의 충격이 없었다면 아주 파괴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다만 위기 초기 유가 폭락 등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듯이 셰일오일 생산을 중심으로 원유의 세계적인 과잉생산이 현저했고 이것이 코로나 19 대유행(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의 충격과 만나면서 관련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과잉생산은 위기 이전 진행된 수익성의 하락이나 가동률지표 등으로 판단컨대 다른 산업(예를 들어 자동차 등 제조업과 정보기술산업)에서도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19 대유행(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과 만나면서 산업 업종에 따라서는 그 과잉생산의 사후 전개양상이 다른 위기 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산업처럼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로 과잉생산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어 버리기도 하고(혹은 후일로 연기되기도 하고), 자동차산업처럼 과잉생산 후유증을 여전히 앓고 있는 산업도 있다([그림 9] 참조).

[그림 9] 산업생산지수: 자동차산업과 반도체 산업



주) 세모 표식: 반도체 산업, 표식 없음: 자동차산업

자료: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한편 항공산업이나 레저 및 접객업처럼 다른 위기 시기에는 대체로 진행되던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에 의해 과잉생산이 은폐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각각의 경우 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일정하게 해결기미가 보이거나 정부의 개입이 약화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에는 팽창되었던 비대면 산업의 축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금융적 재정적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원유생산업의 경우 석유수출국기구(OPEC), 러시아, 미국 등이 참여한 세계적인 카르텔을 통한 생산감축 및 경쟁제한과 이를 통한 가격상승으로 과잉생산 위기를 일정하게 벗어나고 있는데 이 카르텔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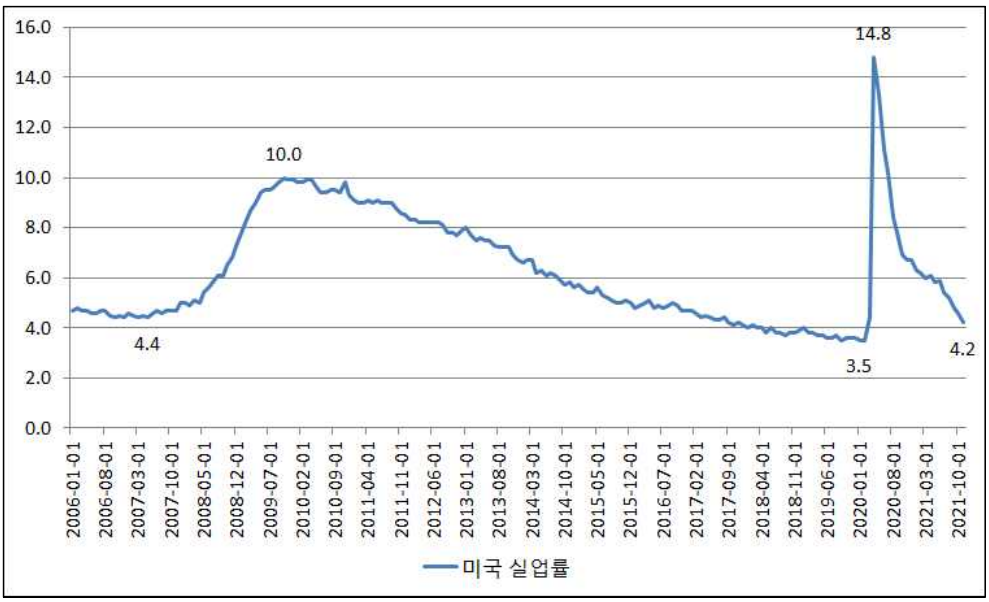
결국 앞서 본, 짧은 기간 동안이긴 하지만 매우 심각했던 이번 미국의 경제위기(사실 중국, 한국, 미국 등 몇 나라를 제외하면 세계의 상당수의 나라들이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19 대유행(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 그 중에서도 2020년 4월과 5월에 진행된 록다운의 효과가 결정적이었고 여기에 과잉생산의 문제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록다운으로 최악의 성장률을 낳은 미국의 경제상태를 폴 크루그먼은 '유도된 혼수상태'(induced coma)라 칭했다. 물론 이런 '유도된 혼수상태'는 코로나 19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느 순간 방역을 일정하게 포기하면서 미국경제는 혼수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트럼프 때 2번, 바이든 때 1번, 세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재난지원/경기부양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든 혹은 느리게든 대체로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다.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추세는 확고한 추세가 되었다. 다만 코로나 19 대유행은 기대에 못 미친 백신 접종률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등으로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어서 집합, 이동, 레저 및 접객 관련 산업은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라 해야겠다.

(2) 고용

① 실업률과 고용률

2020년 4월 14.8%까지 상승했던 미 실업률이 2020년 11월 4.2%까지 하락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2008년 위기 직전 최저치 4.4%와 이번 위기 직전 최저치인 3.5% 사이에 있어 거의 완전고용에 이른 듯이 보인다.

[그림 10] 미국 실업률(2006년 1월-2021년 11월)



자료: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여전히 위기 직전에 비해 400-500만명이 많은 상태로([그림 11]참조), 2021년 11월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위기 직전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고치에 이른 2020년 1월의 63.4%에 비해 1.6%포인트가 낮은 상태다([그림 12] 참조).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를 구분하는 경제활동인구에 아예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위기 이전이라면 이들 대다수는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실업자에 포함시킨다면 공식실업률보다 약 3%포인트 가량 실업률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실질실업률은 여전히 7%대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초반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다. 그 이후 2015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15] 다시 2015년 중반부터 조금씩 오르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번 위기 와중에 한 단계 더 내려갔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철수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 비경제활동인구의 존재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16]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이직률이 급증하고 있고[17], 더 나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레저 및 접객업 현장직 시급평균은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18] 그리고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19]

이런 노동력 부족에 대한 원인으로 일부에서는 평상시보다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넉넉한 실업수당과 아이돌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는 넉넉한 실업수당이 사라진 이후 고용변화가 미미했고, 록다운 이후 아이를 가지지 않은 여성노동자의 복귀율과 아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복귀율이 동일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 대신에 오터는 노동자들의 자신의 시간에 대한 가치평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미국노동자들이 저임금의 열악한 조건의 서비스 노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고 가족, 교육, 레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 한다는 것이다. 출산률 저하,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민자 통제로 노동력부족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던 터에 노동자들의 이런 태도변화가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킨 것이라는 것이다.[20]

---

15) 미국의 남성 핵심생산인구(25-54세)의 낮아진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인으로는 이른 은퇴, 진학, 병 또는 장애, 가사담당 등을 들 수 있지만,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1980년대 이래 (생산성 증가에 비해) 정체된 실질 임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https://www.bls.gov/opub/btn/volume-4/people-who-are-not-in-the-labor-force-why-arent-they-working.htm 를 참조하라.

16) https://www.bls.gov/charts/job-openings-and-labor-turnover/unemp-per-job-opening.htm 를 참조하라.

17) https://fred.stlouisfed.org/series/JTSQUR 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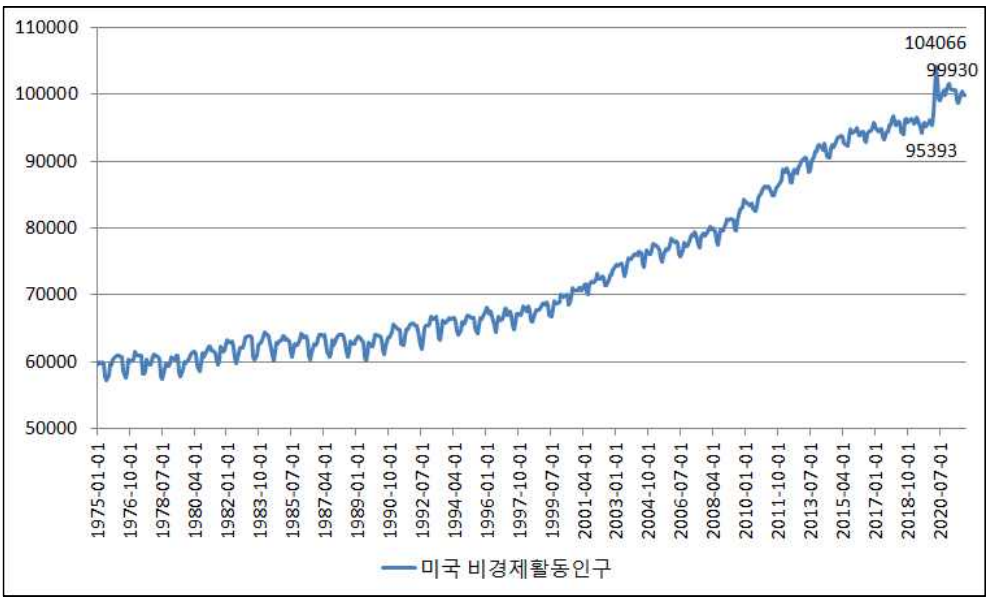
18) https://fred.stlouisfed.org/graph/?g=HK9G 를 참조하라.

19) https://www.nytimes.com/2021/10/14/business/economy/john-deere-strike.html 를 참조하라.

20) https://www.nytimes.com/2021/09/04/opinion/labor-shortage-biden-covid.html 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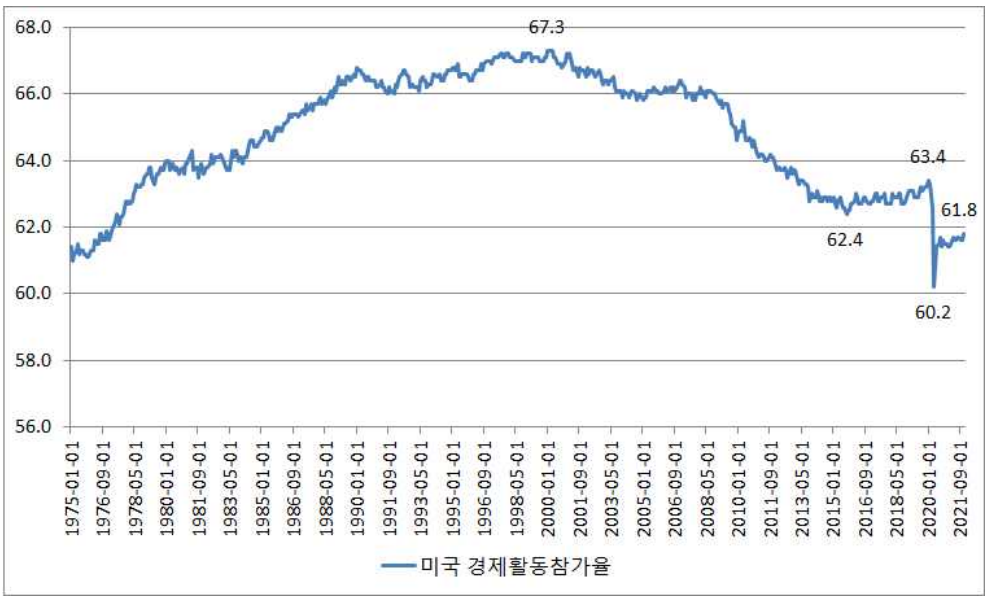
결국 일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기피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철수가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1] 미국 비경제활동인구(2006.1-2021.11)(단위: 천명)



자료: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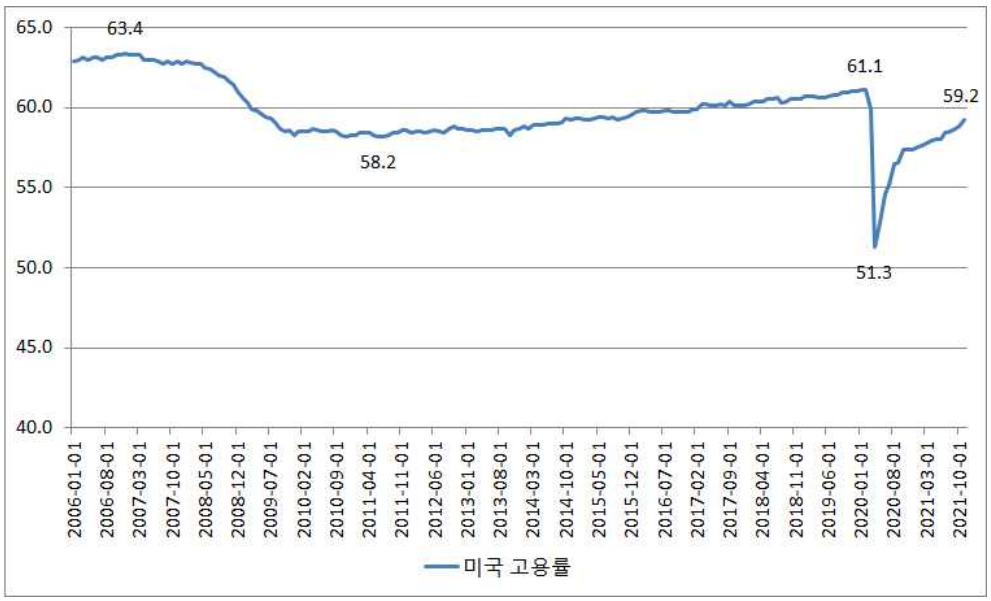
[그림 12] 미국 경제활동참가율(1975년 1월 - 2021년 11월)



자료: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고용률의 경우 2008년 위기 이전 63.4%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2008년 위기 이후 58.2%까지 낮아졌다([그림 13] 참조). 그 이후 점차 높아져 이번 위기 직전에 61.1%까지 높아졌는데 다시 위기 와중에 51.3%까지 폭락했다가 2021년 11월 59.2%까지 상승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기 직전의 고용률 61.1%에는 아직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08년 위기 이후 최저 고용률보다 불과 1.0%포인트 높은 고용률이다. 물론 록다운으로 이번 위기 와중에 최저치였던 51.3%에 비하면 7.9%포인트 높아졌다.

[그림 13] 미국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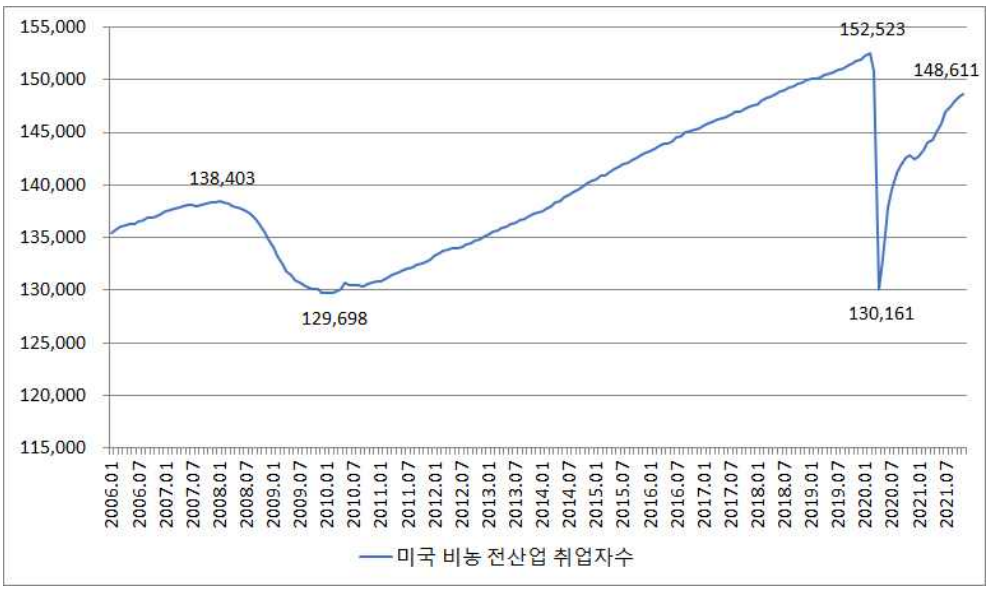


자료: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② 취업자 규모

이번 경제위기의 전개 및 이로부터의 회복 양상은 취업자 규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그림 14] 참조). 취업자 회복 정도는 총생산 회복 정도에 못 미친다. 취업자 규모는 2020년 3월과 4월 대폭 감소한 뒤 그 뒤로는 대체로 다소 급격하든 혹은 다소 완만하든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 규모가 최저치로 떨어진 2020년 4월에는 2020년 2월 취업자에 비해 2,236만명, 14.7%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1년 11월 취업자 규모는 위기 이전 취업자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 2월의 취업자 규모에 비해 여전히 391만명, 약 2.6%가 감소한 상태다. 총생산 규모는 위기 이전 총생산 규모를 이미 2021년 2사분기에 넘어섰는데 취업자 규모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림 14] 미국의 비농 전산업 취업자수(단위: 천명)



자료: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③ 산업 업종별 취업자 변동

산업 업종별 취업자 변동 추이를 살펴보자([표 3] 참조). 취업자가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업종은 광업 및 벌채업에서 채굴지원사업(-11.8%, 약 3만8천명 감소), 건설업에서 비주거용전문건설업(-5.0%, 약 13만5천명 감소), 제조업에서 자동차 및 부품산업(-6.3%, 약 6만3천명 감소), 소매업에서 의류 및 악세사리업(-17.8%, 약 22만6천명 감소), 운수 및 창고업에서 항공운송(-9.0%, 약 4만7천명 감소)과 지상 여객운송(-18.1%, 약 8만9천명 감소), 정보업에서 영화 및 사운드레코딩 산업(-21.9%, 약 9만7천명 감소), 전문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단기노무서비스업(-5.2%, 약 15만3천명 감소)과 여행사업(-22.5%, 약 5만6천명 감소),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에서 간호 케어 시설업(-15%, 약 23만8천명 감소)과 아동 돌봄 서비스업(-10.3%, 약 10만8천명 감소), 레저 및 접객업 전체(-7.9%, 약 133만4천명 감소), 정부부문에서 주정부(-5.1%, 27만3천명 감소)와 지방정부(-4.6%, 67만8천명)다. 그리고 취업자가 늘어난 업종은 건설업에서 주택건설업(+5.8%, 4만9천명), 운수 및 창고업에서 택배업(+24.6%, 21만7천명)과 창고업

(+13.6%, 18만명)이다.

재정이 대규모로 투여되어도 코로나 19 대유행 취약 업종의 취업자는 여전히 위기 이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19 대유행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운수 및 창고업에서의 취업자는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확대의 부산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표 3] 미국의 산업 업종별 취업자 규모 변화(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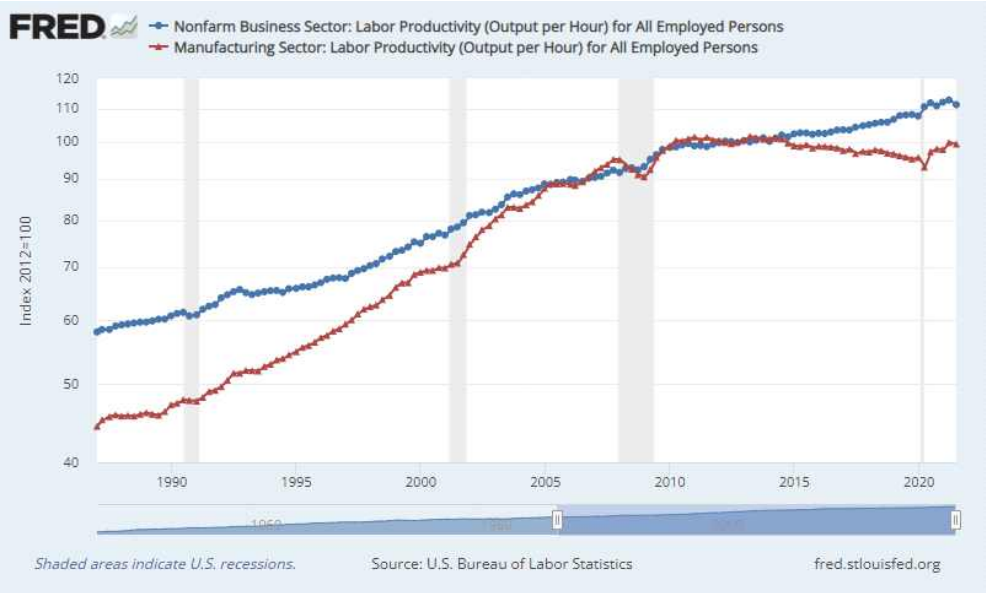
	2020.2	2020.4	2021.10	2021.11	21.10월-21.11월	21.11월/21.10월	20.4월-21.11월	21.11월/20.4월	20.2월-21.11월	21.11월/20.2월
비농 전산업 고용 규모	152,523	130,161	148,401	148,611	210	100.1%	18,450	114.2%	-3,912	97.4%
민간	129,688	108,335	126,476	126,711	235	100.2%	18,376	117.0%	-2,977	97.7%
상품생산	21,137	18,571	20,664	20,724	60	100.3%	2,153	111.6%	-413	98.0%
광업 및 벌채업	690	622	647	645	-2	99.7%	23	103.7%	-45	93.5%
채굴지원사업	317	267	280	280	-1	99.8%	13	104.8%	-38	88.2%
건설업	7,648	6,535	7,502	7,533	31	100.4%	998	115.3%	-115	98.5%
일반건설업	1,695	1,456	1,706	1,716	10	100.6%	259	117.8%	21	101.2%
주택건설업	840	709	885	889	4	100.5%	180	125.3%	49	105.8%
전문 건설업	4,843	4,077	4,740	4,753	13	100.3%	677	116.6%	-90	98.2%
비주거용 전문건설	2,701	2,273	2,559	2,566	7	100.3%	293	112.9%	-135	95.0%
제조업	12,799	11,414	12,515	12,546	31	100.2%	1,132	109.9%	-253	98.0%
내구재	8,007	7,062	7,785	7,800	15	100.2%	738	110.5%	-207	97.4%
운송장비	1,732	1,328	1,629	1,625	-4	99.8%	297	122.4%	-106	93.9%
자동차 및 부품	986	626	934	924	-10	98.9%	297	147.5%	-63	93.7%
비내구재	4,792	4,352	4,730	4,746	16	100.3%	394	109.1%	-46	99.0%
화학제품	855	832	863	863	0	100.0%	31	103.7%	8	100.9%
민간서비스업	108,551	89,764	105,812	105,987	175	100.2%	16,223	118.1%	-2,564	97.6%
유통, 운송, 유틸리티	27,876	24,513	27,714	27,751	37	100.1%	3,238	113.2%	-125	99.6%
도매업	5,895	5,486	5,739	5,747	8	100.1%	261	104.8%	-148	97.5%
소매업	15,610	13,235	15,454	15,434	-20	99.9%	2,199	116.6%	-176	98.9%
의류 및 의류악세사리	1,271	490	1,062	1,044	-18	98.3%	555	213.3%	-226	82.2%
운수 및 창고업	5,823	5,249	5,983	6,033	50	100.8%	785	114.9%	210	103.6%
항공운송	517	439	467	470	3	100.7%	32	107.2%	-47	91.0%
지상 여객 운송	493	306	404	404	-1	99.8%	97	131.7%	-89	81.9%
택배	883	889	1,073	1,100	27	102.5%	210	123.7%	217	124.6%
창고업	1,328	1,238	1,499	1,508	9	100.6%	270	121.8%	180	113.6%
정보산업	2,914	2,633	2,793	2,791	-2	99.9%	158	106.0%	-123	95.8%
영화 및 사운드 레코딩 산업	442	213	349	345	-3	99.0%	132	161.9%	-97	78.1%
금융업	8,875	8,596	8,892	8,905	13	100.1%	309	103.6%	30	100.3%
전문 및 사업 서비스	21,469	19,082	21,310	21,400	90	100.4%	2,318	112.1%	-69	99.7%
관리 및 지원 서비스	8,876	7,154	8,475	8,517	42	100.5%	1,363	119.1%	-359	96.0%
단기 노무 서비스	2,945	1,947	2,786	2,792	6	100.2%	845	143.4%	-153	94.8%
여행사업	221	170	166	165	-2	99.0%	-6	96.6%	-56	74.5%
교육 및 의료 서비스	24,565	21,722	23,768	23,772	4	100.0%	2,050	109.4%	-793	96.8%
보건의료업	16,492	14,876	16,040	16,042	2	100.0%	1,166	107.8%	-450	97.3%
간호 케어 시설	1,586	1,534	1,357	1,348	-8	99.4%	-186	87.9%	-238	85.0%
사회지원서비스	4,294	3,593	4,104	4,107	4	100.1%	514	114.3%	-187	95.6%
아동 돌봄 서비스	1,047	673	941	938	-2	99.8%	265	139.4%	-108	89.7%
레저 및 접객업	16,915	8,691	15,558	15,581	23	100.1%	6,890	179.3%	-1,334	92.1%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리크리에이션	2,502	1,169	2,222	2,227	5	100.2%	1,058	190.5%	-275	89.0%
공연예술 및 관람스포츠	525	274	480	488	8	101.6%	214	178.4%	-37	92.9%
오락, 도박, 레크리에이션	1,802	770	1,593	1,591	-2	99.9%	821	206.6%	-211	88.3%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	14,413	7,523	13,337	13,354	18	100.1%	5,832	177.5%	-1,059	92.7%
숙박업	2,105	1,189	1,796	1,803	7	100.4%	613	151.6%	-302	85.6%
식당 및 주점	12,308	6,333	11,541	11,552	11	100.1%	5,218	182.4%	-757	93.9%
정부	22,835	21,826	21,925	21,900	-25	99.9%	74	100.3%	-935	95.9%
연방정부	2,863	2,883	2,877	2,879	2	100.1%	-4	99.9%	16	100.6%
주정부	5,303	5,074	5,039	5,030	-9	99.8%	-44	99.1%	-273	94.9%
지방정부	14,669	13,869	14,009	13,991	-18	99.9%	122	100.9%	-678	95.4%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3) 생산성의 변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위기 직후와 이번 위기 직후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난 생산성증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생산성증가율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위기 이후 2020년 3사분기부터 생산성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간당 생산량지수가 2010년대 초반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림 15] 미국 제조업과 전산업 시간당 실질생산지수 (2012=100)(1987.1/4-2021.3/4)



주) 원 표식:비농 전산업, 삼각형 표식: 제조업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이에 반해 비농 전 산업 생산성 증가율은 2008년 위기 이전에는 대체로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낮았으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보다 대체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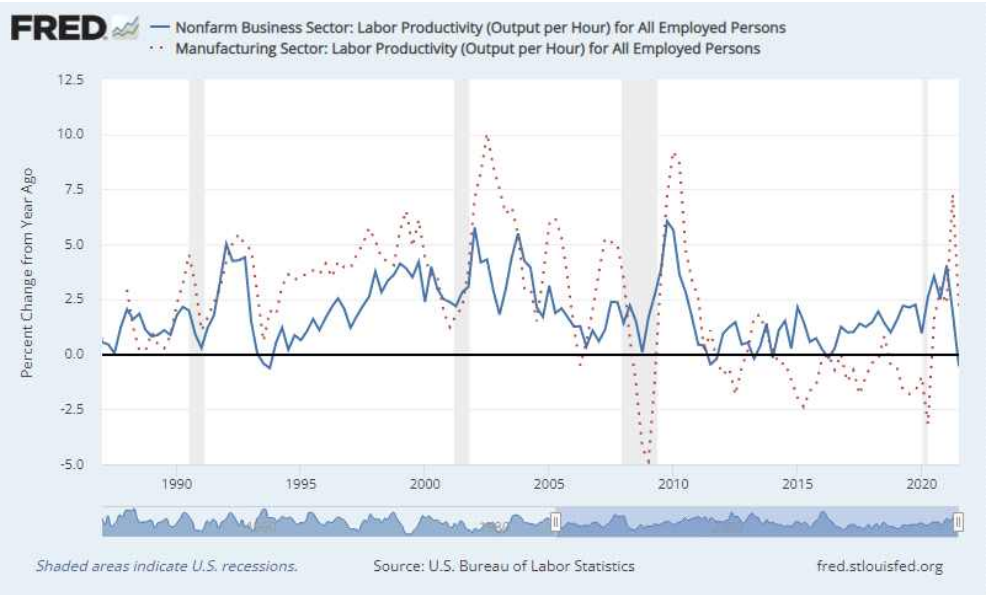
한편 제조업이든 비농 전산업이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은 생산성증

가율이 매우 높다.

비농 전산업의 경우 2010년대 후반부에도 생산성증가가 포착되고 있으나 1990년대 후반부에 비하면 그 정도가 덜하다.

제조업의 경우 최근 몇 개 분기 생산성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전년 동기 생산성증가율이 너무 낮은 데서 오는 기저효과 때문이라 해야겠다([그림 15]와 [그림 16]을 참조하라).

[그림 16] 미국 제조업과 전산업 시간당 실질생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988.1/4-2021.3/4)



주) 실선: 비농 전산업, 점선: 제조업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2) 논쟁점들

(1) 물가상승

2021년 4월 이후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속해서 4-6%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6.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1982년 중반 이래

최고 상승률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정부지출이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다([그림 17] 참조). 사실 바이든의 재난구제/경기부양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오바마 집권 당시 국가경제회의 위원장을 지낸 래리 서머스로부터 경고가 있었다. 잠재 국내총생산에 못 미치는 실제 국내총생산의 크기(산출갭)에 비해 경기부양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오바마 때는 너무 적은 부양 규모가 문제였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번에는 경기부양 규모가 너무 커서 30년 내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라 하였다.[21)]

바이든 정부의 정책당국자들과 주변의 학자들은 처음에는 올 연말까지 진행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 했다가 점점 인플레이션 지속기간에 대한 전망을 삼가고 있다.

한편 현재의 물가상승은 실물제품에 대한 보복 소비 증가 및 이로 인한 물류상의 애로, 반도체칩 부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철수 및 임금인상 등 수요와 공급 측면 양자 모두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수요 증가가 위기 이전 증가 추세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 물가인상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코로나 19 대유행의 완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실물제품에 대한 보복소비 둔화 등으로 높은 인플레가 오래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22)]

폴 크루그먼의 경우 1970년대와 같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2차대전 때 억제되어 있던 수요가 전쟁 종료 후 폭발해 발생한 1946-48년의 인플레이션에 유비한다. 한때 20%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어느 순간 사라졌던 경우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완화하면서 보복소비가 일었고 이에 공급 장애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일부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철수하면서 발생한 현재의 인플레이션 양상이 1946-48년의 그것과 많이 닮았다는 이유다.[23)]

한편 갈수록 물가상승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 연준도 양적완화를

21)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2/04/larry-summers-biden-covid-stimulus/ 를 참조하라.

22) https://www.nytimes.com/2021/11/11/opinion/inflation-history.html 를 참조하라.

23) https://www.nytimes.com/2021/12/10/opinion/inflation-economy.html 를 참조하라.

위한 채권매입의 규모 축소를 11월말에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림 17] 미국의 소비자물가 증가율(1940년 1월-2021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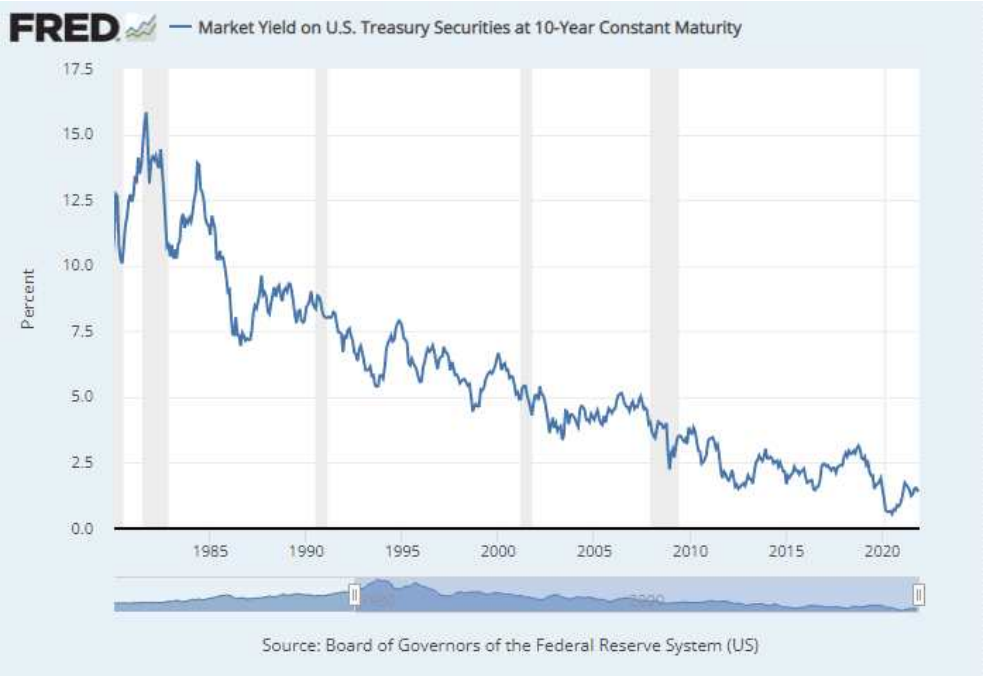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2) 이자율 상승 논란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로 본 금리는 1980년대 초반 이래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2020년 4월 경 위기가 한창일 때 0.6%까지 하락했다가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1.7%대까지 상승했다. 2021년 11월 현재 1.4-1.5%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지출 증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 또한 많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는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그림 18] 참조).

물가를 감안한 실질수익율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이다([그림 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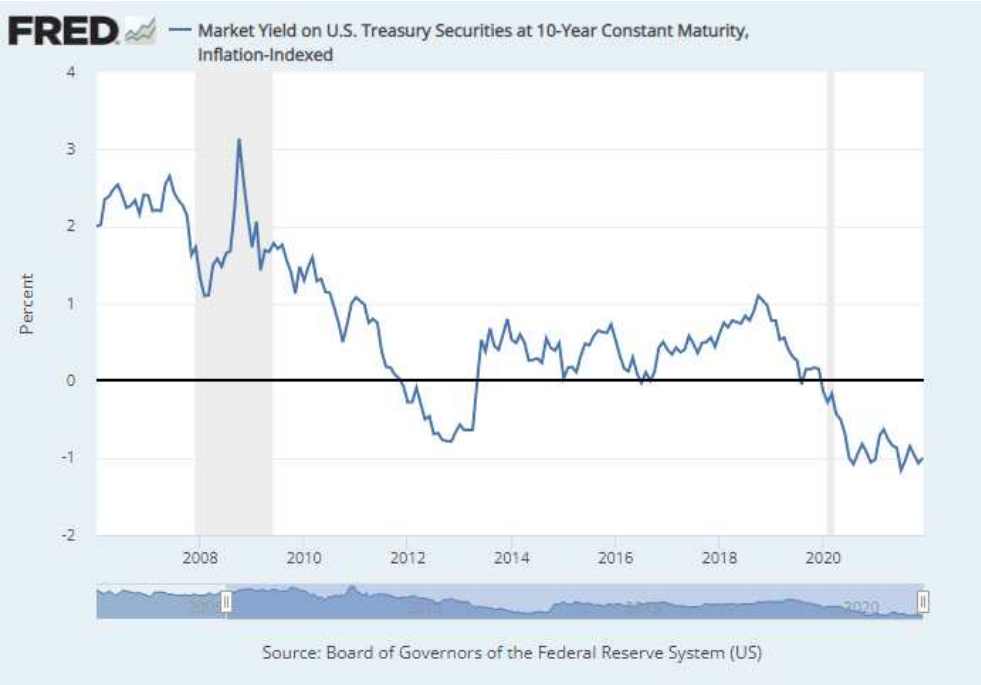
[그림 18]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바이든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이자율이 낮은 것은 연준이 재무성증권을 많이 사고 있어서, 즉 양적완화를 하고 있어서이고 총통화(M2)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물가가 베네수엘라처럼 폭등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폴 크루그먼은 정부채 이자율이 낮은 것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소비를 할 수 없는 가계의 저축 증대 -> 은행의 지급준비금 증가 -> 연준의 정부채 매입의 순환을 가진다면서, 가계의 저축액,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증가액, 연준의 정부채 매입액 규모가 거의 동일하다고 하면서 정부채 이자율이 낮은 이유는 가계의 저축증대가 근본 원인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본원통화가 대폭 늘었어도 총통화(M2)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물가도 별로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국면에서 가계의 저축액 증가로 인해 총통화(M2)가 많이 늘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통화팽창이 아니다. 그래서 연준이 정부채를 많이 사고, 현 국면에서 M2가 증가하는 것은 (물가인상으로 이어지는) 걱정거리가 될 수 없다고도 한다.[24)25)]

[그림 19] 미 재무성증권 10년물 실질 수익율(2006.1.2.-2021.12.8.)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결국 비록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몇차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당장 정부채수익률로 대표되는 시중이자율이나 물가를 감안한 실질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 바이든 주변 경제학자들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3)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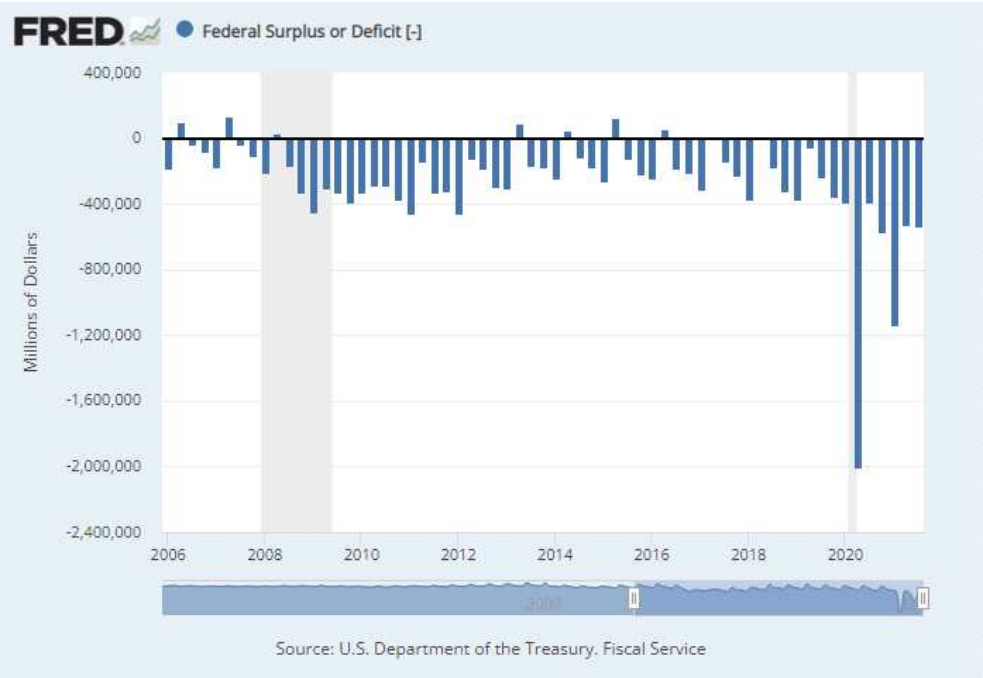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적자가 폭증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이번 정부지출이 재난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24) 참고로 '본원통화=현금통화+은행의 지급준비금', '협의의 통화(M1)=민간보유현금+ 은행 요구불예금', '총통화(M2)=M1+은행의 저축성예금'을 일컫는다.

25) https://www.nytimes.com/2021/05/21/opinion/money-federal-reserve-deficit.html 를 참조하라. 폴 크루그먼의 얘기는 미 연준이 본원통화를 적절히 공급해서 성장과 인플레와 관련이 깊은 M2를 통제할 수 있다는 통화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이다([그림 20] 참조).

[그림 20] 미국의 분기별 재정적자(2006.1/4-2021.3/4)(단위: 백만달러)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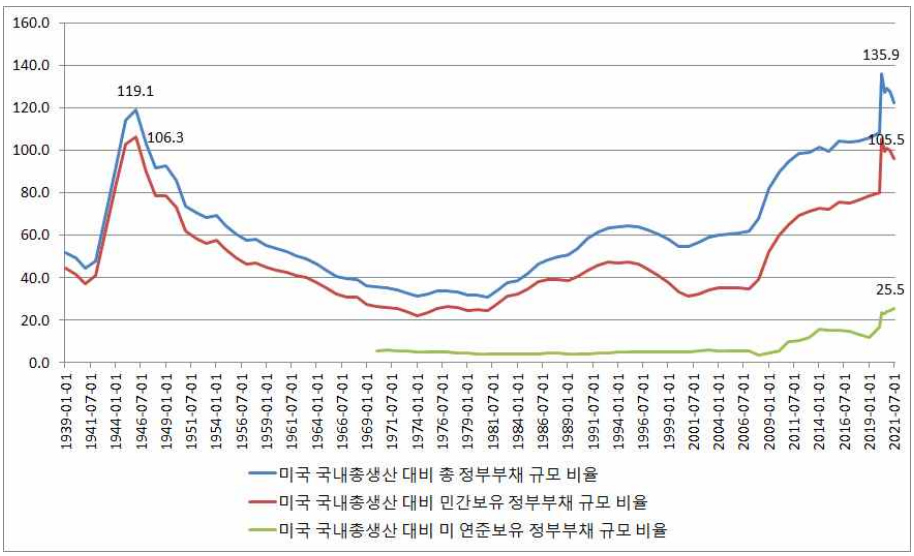
정부지출 증대로 2020년 2사분기 국내총생산 대비 미국 총 정부부채 규모 비율은 135.9%로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의 119.1%를 넘어섰고, 국내총생산 대비 미국 민간 보유 정부부채 규모 비율은 105.5%로 1946년의 106.3%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비 민간보유 중 상당부분은 미 연준 보유인데 최근 들어 양적완화로 인해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그림 21] 참조)

그러나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이자 지불액 비중은 여전히 매우 작다. 이 또한 1946년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 대비 이자지불액 비중이 가장 컸었던 시기는 1991년이었는데 1946년과 2020년의 이자지불액 비중은 공히 1991년의 이자지불액의 반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자율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 있었고, 당연히도 재난구

제 혹은 경기부양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민주당 계열의 경제학자이자 전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가 대표적이다. 그의 지적대로 국내총생산 대비 미 정부부채(민간 보유액)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이자 지불액 비중은 현재 1991년의 반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림 22] 참조).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946년과 2020년 공히 낮은 이자율로 인해 국내총생산 대비 이자지불액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다. 따라서 정부부채로 인한 미국경제의 부담을 그 이자지불(대 국내총생산)의 크기로 얘기할 수 있다면(정부부채를 갚아 그 절대 규모를 낮추는 경우란 거의 없다), 미국경제가 정부부채 규모가 보여주는 정도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자율은 계속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구조적 위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주창자들의 얘기이고 정부부채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 이들의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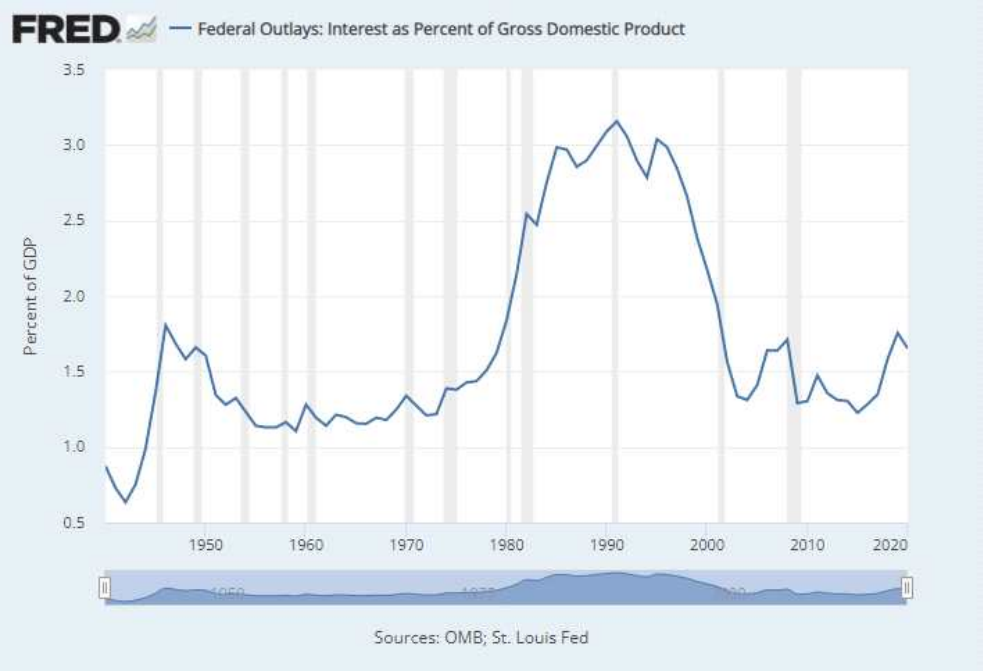
[그림 21]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각 주체의 정부부채 규모 비율



주) 2019년까지의 수치는 연간 수치, 2020년 이후 수치는 분기별 수치

자료: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그림 22]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이자지불액 비중 (%)(1940-2020)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4) 비금융 법인기업의 수익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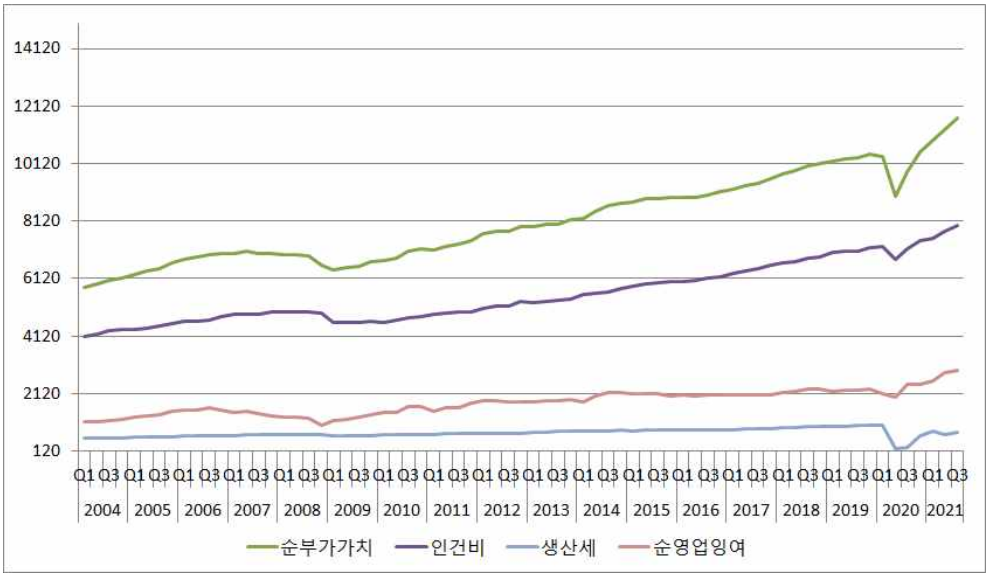
위기 이후 폭락했던 증권시장은 이전 최고치를 넘어서 크게 상승하였다. 기업 수익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순부가가치는 이전 추세를 벗어나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록다운 이후의 보복소비 효과로 보인다. 인건비와 순영업잉여도 위기 이전 추세보다 조금 벗어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는 순부가가치 증가에서 그 원인이 있을 것이고, 생산세의 감소에서 일부 연유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그림 23] 참조). 애플, 구글, MS 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은 위기 이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지속적일 것인가 여부다. 소비도 보복소비에서 벗어나 정상화할 경우 순영업잉여도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시 구조적 위기가 규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만일 보복소비가 상당기간 지속하고

기업수익이 증대하고 증권시장도 다시 달아오르고 이에 발맞춰 기업투자까지 크게 증가한다면 이후 경기순환상의 정점의 시기는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23] 미국의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들



자료: 미국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

5. 전망

바이든의 대규모 재난구제/경기부양 정책은 케인스주의 정책의 색채가 뚜렷해 보인다. 노조할 권리를 강조한 데에 이르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면 바이든의 경제정책이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완전히 정착할 것인가? 그리고 만일 바이든이 케인스주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미국자본주의는 순항할 것인가?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

우선, 바이든의 경제정책이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올해를 넘어서 내년 중간선거까지 꽤 높은 물가상승이 지속한다면 바이든 정책은 심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미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과 '사회보장 확충과 기후변화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의 논의과정에서 이런 조짐은 나타났다. 만일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한다면 야심찬 바이든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사회보장 확충과 기후변화 법안'이 무산된다면 지금도 쫙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사회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질 것이고 내년 중간선거는 사활을 건 전장이 될 것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통제가 안 될 경우 래리 서머스 얘기대로 트럼프의 재등장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지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사회보장 확충과 기후변화 법안'까지 통과되어 실천된다면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케인스주의 정책의 색채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바이든의 경제정책이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안착한다 하더라도 이 정책의 성과에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으로선 백신접종률이 늘고 그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나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다시 경제가 급전직하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델타변이, 오미크론 등 다양한 변종이 등장해서 현재로선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다시 늘고 있어

서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일정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속도에 비해 백신접종완료나 부스터샷의 속도가 더딜 경우 세계경제나 미국경제에 다시 교란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백신접종률 증대를 통한 대유행 완화에 중점을 두고 2020년 4월과 5월 같은 록다운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케인스주의 정책의 당장의 성과에 영향을 주기로는 다음과 같은 변수도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막대한 재난구제/경기부양과 백신접종 증가로 경제 정상화속도가 꽤 빨라 위기 이전 생산규모를 외양적으로는 거의 회복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구명줄(양적완화 및 대출 증대, 정부지출 증대)에 의지해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소위 좀비기업들이 이런 정부의 구명줄이 끊어질 경우 미국경제에 다시 위협요인이 되고 그런 한에서 미국경제가 활기찬 성장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케인스주의적 바이든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위기가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고 개입을 할 것이다. 만일 이런 정부개입을 상정한다면 미 경제의 당장의 주된 문제는 파국적인 위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지부진한 회복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정기간 뒤 잦아들고 코로나 19 대유행을 거의 벗어나 미흡하나마 바이든의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기조는 이후 정부들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런 케인스주의적 정책의 안정적인 집행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낮아진 마르크스적 이윤율 및 여기에서 비롯한 자본축적의 둔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AI)의 대대적인 활용 및 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의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생산성의 약간의 상승은 경제위기 시기의 구조조정 효과라 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면서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 미국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경제의 활기찬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윤율 수준과 어울리지 않게 자본축적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텐데 이 경우 마르크스적 이윤율(=생산가격 이윤율)의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일정하게 진행되는데 케인스주의 정책으로 착취율의 제고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면 말이다. 1970년대와 같은 양상이 그 정도는 덜할지라도 천천히라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는 8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보다 더 심각한 양상의 불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이윤율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한 불황에는 독점자본의 문제, 부채의 늪에서 헤매는 국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및 또 다른 자연생태계의 교란 등의 변수 중의 일부 혹은 전부가 가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바이든의 케인스주의 정책이 이후 정부에서도 안착이 되어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완전한 탈피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그 구조적 위기 안에서도 상대적인 호황 및 주기적인 공황/불황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 올 것이다.[26]

26) 케인스주의자 폴 크루그먼은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침체(순환적 공황)에 대응을 적절히는 할 수 있어도 정부 정책으로 장기적인 성장률을 두드러지게 끌어올리기는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윤율 저하에 따른 구조적 위기 상황을 어렴풋이 포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https://www.nytimes.com/2021/05/31/opinion/biden-budget-proposal.html 를 참조하라.